

# 시장 ·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 홍 균

## I. 근대성의 위기와 시민사회단체의 등장

21세기 초입에 서 있는 인류는 역사 전환의 과정 속에 있다. 근대성으로부터 반성적 근대화로의 역사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그 전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근대성은 한편에서는 인류에게 물질적인 복지를 제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부의 극심한 차이, 환경의 파괴, 실업 문제의 발생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연의 파괴와 자연 자원의 고갈로 근대성은 지속적으로 지탱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고, 근대성의 연장선 위에서 발전한 신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하버마스는 어느 체계가 그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체계 위기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sup>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성의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중반부터 근대성의 위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sup>2)</sup> 그것은 시민과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말에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반성적 근대화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 이후 본격화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반성적 근대화의 주체는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근대성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자본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각각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externalization)와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시민과 시민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 반성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들에 의하여 근대화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지금까지 근대성은 시장과 국가의 두 축에 의하여 진행되었지만 근대성은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와 근대성을 지지해 왔던 자연 자원의 고갈로 점차 체계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과 국가, 두 축에

1) 위르겐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 정당성 연구』, (청하, 1983), 1장.

2) Georg G. Iggers,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7), p 6.

3)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울리히 벡이나 영국의 사회학자 안토니 기든스는 공통적으로 근대성의 위기를 진단하고, 근대성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진단은 체계의 확장이고 처방은 의사소통 합리성의 이론이며, 벡의 진단은 근대화이고 벡의 처방은 반성적 근대화이며, 기든스의 진단은 인위적 불확실성이고 기든스의 처방은 삶의 정치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여전히 추상적인 시민을 논의의 중심에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Jue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II, (Suhrkamp, 1981),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Suhrkamp, 1986), 안토니 기든스, 『제 3의 길』, 한상진·박찬욱 옮김, (생각의 나무, 1998).

의한 근대성은 한편으로는 자연 자원과 사회 자원에 의존하여 운영될 수 있고, 동시에 부담을 자연과 사회에 외재화하여야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시스템은 자연 자원의 끊임없는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황폐화되어 더 이상 시장 시스템의 요구를 계속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에 더하여 시장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의 외부에 많은 부담을 담보로 하여 작동하고 그 부담을 시장 시스템의 외부에 방치하고 있다. 그것은 혹시 자연 자원이 시장의 시스템을 계속 지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시장의 시스템은 환경 부담 비용을 다 지불하고서는 작동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인간과 사회의 맥락에서 시장의 시스템에 의한 부담의 외재화는 인간성과 인간 관계의 파괴와 실업자의 양산, 노동조건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근대 국가는 '시장에 의한 부담의 외재화'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국가와 시장의 결합 형태에 따라 해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근대 국가는 시장의 시스템이 외재화한 문제들 가운데 일 부분만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sup>4)</sup> 그것은 근대 국가는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사익 추구보다 상위 가치로 설정하여 행동할 수 없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사익 추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의 파괴를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근대 국가는 한편에서는 시장의 활성화와 사적 영역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과제를,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선과 공공재, 공공 영역의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과제는 서로 상호 모순적이다. 어느 한 편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다른 한 편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는 유럽의 사회 복지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실업과 환경 파괴라는 상호 모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장의 활성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3-4 % 이상의 경제 성장율에 도달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도 시장에서 발생한 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상호 모순적인 신념에 따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근대 국가의 양면성과 이중성은 근대 국가가 태생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sup>5)</sup>

위에 지적한 시장과 근대 국가의 한계를 인식한 사회 구성원들을 시민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시민들의 추상적인 집합을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근대성의 초기에 자신의 사적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르조아지를 시민이라고 불렀다면 반성적 근대화의 초입에서는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시장이 야기하고 국가에 의하여 모두 해결되지 않는 근대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으로 분류된다.

그러한 시민과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시민과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단체이다.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스스로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이 되어 시민사회단체에 회비를 내고 시민사회단체에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사회단체를 감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출현으로 추상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었던, 그리고 이합집산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시민과 시민사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시민사회단

4)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연구』, 1장과 2장.

5) 물론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는 각 사회 체제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각 사회 체제는 국가와 시장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와 시장이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사회복지국가 형태, 자유주의국가 형태, 그리고 정경유착의 형태로 구분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국가에서 가장 높고 정경유착의 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체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론 형성으로 가끔 추상적으로 존재가 확인되거나 시민 운동으로 가끔 그 존재가 확인되던, 이 합집산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시민과 시민사회와는 다르게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성과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sup>6)</sup> 그로 말미암아 시민사회단체는 반성적 근대화 또는 역사 전환의 중심 축으로서의 등장하고 있다.

비록 그 전환이 울리히 벡이 기대하는 것만큼 진행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sup>7)</sup>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대화에서 반성적 근대화로의 전환의 축으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의하여 시민과 시민사회가 부활되고 시민사회단체로 다시 조직되고 있고 또한 국경을 초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가 결성됨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범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넓어져 가고 있다.

시민과 시민 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와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로부터 그 존재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근대 국가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는 공공 영역,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고 국가에 의한 문제 해결의 잔여 부분은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감시, 감독되거나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 II.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에 대한 이해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지금까지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사익 추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고 사익 추구는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한 설명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가운데 사적 영역의 인정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sup>8)</sup>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를 이론화하지 못하고 공익을 배려하는 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고 인간의 통제 밖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장의 정체를 밝힐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장의 작동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사익 추구의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하여 지배됨으로써 작동되고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 관찰하면 시장은 사익 추구자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확대 재생산율이고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시장이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익 추구의 존재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인간의

6) 본인의 줄고,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부 조직”, 『동서연구』, (1997), 참조.

7) Ulrich Beck,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Suhrkamp, 1987)

8) 이 부분에서 한나 아렌트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다; “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 노예와 같이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이방인처럼 공론 영역을 설립하지 않는 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 1996), 91쪽.

본성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점이다. 곧 사회 구성원들은 확대 재생산율이라는 사회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변화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거나 사익 추구의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한 시장의 작동은 일차적으로는 물질적인 부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하지만<sup>9)</sup> 그 물질적인 부의 증가만큼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를 시장 바깥에 배출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은 부의 증가라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일차적으로는 확대 재생산율에 이끌려서 진행되고 그에 의하여 시장은 부의 증대를 가져온다.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은 사익 추구의 전제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의 문제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II.-1 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맑스로부터 확대 재생산율로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라는 시각은 맑스에 빚지고 있지만 맑스의 소외론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맑스의 이론과는 구별된다.

맑스 이론의 재구성은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시장의 지배를 추론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곧 그것은 시장에서 맹목적인 부의 축적을 위한 경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확대 재생산의 강제의 문제와 그에 의한 시장의 작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리고 공공재와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에 보다 더 잘 접근하게 된다.

맑스가 산업 자본주의에 던지는 문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그 하나는 생산 수단을 매개로 한 인간 사이의 지배의 문제이고, 그 다른 하나는 자본가 사이의 경쟁, 또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소유욕의 문제이다. 인간 사이의 지배의 문제에서 출발한 맑스의 소외론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소외 -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유적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생산 결과물로부터의 소외 - 에 국한하고 있다.<sup>10)</sup>

맑스에게 자본주의의 문제는 그가 생산 관계라고 표현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그 근원적인 뿌리가 있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대다수 집단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에 의한 지배의 문제에 노동자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 가치설이 결합되면서 생산 관계를 자본주의 제일의 모순으로 규정했었다. 그 생산 관계는 상품의 교환 가치와 연결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문제, 기계화에 의한 산업 예비군의 대량 창출의 문제, 마지막에는 경향적인 상대적 이윤율의 하락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맑스는 자본주의 시장이 자본가들의 소유욕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보았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맹목적인 게임에 동원되는 것으로 설명

9) 하이예크는 물질적인 부의 증가를 공익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의 증가만을 공익이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이예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냐』, 민경국 옮김, (문예, 1990).

10) 칼 맑스, 『경제-철학 초고』, (박종철출판사, 1991)

하고 있다. 그 설명의 뒤에는 자본가들의 수평적인 경쟁을 전제하고 그 수평적인 경쟁에 의하여 산업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논리가 들어 있고, 자본가들이 이윤을 둘러싼 수평적인 경쟁에 계속 참가할 것인지를 자본가들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자본주의는 맑스의 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지속적일 수 없고 스스로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 그 종착점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지만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된다. 두 종착점은 노동자의 궁핍화와 산업 예비군화가 그 하나이고 상대적 잉여율의 경향적 하락의 법칙에 의하여 산업 자본주의 기제 스스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증이 그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의 축을 맑스와 같이 생산 관계에서 출발한 착취의 문제나 경향적인 상대적 이윤율 하락의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의 문제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지배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접근하게 해 준다.<sup>11)</sup>

생산 관계에서 확대 재생산율로 문제들을 바꾸게 되면, 경향적인 상대적 이윤율 하락의 법칙에 의한 자본주의 기제 스스로의 붕괴를 예측하였던 맑스의 이론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변태(Metamorphose)의 과정을 계속 겪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맹목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하는 추동력을 파악하게 해 준다. 또한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을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파악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은 무관심의 영역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되는가를 파악하게 해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시민사회운동의 당위성과 이념을 정립시켜 주기 때문이다.

한 사회 총 이윤을 한 사회의 총 자본가들의 수로 나눈 것이 확대 재생산율 또는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대 재생산율이 정해지게 되면 자본가들에 의한 소유욕에 의하여 자본가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의 범위가 결정되기 시작한다. 곧 확대 재생산율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의 범위는 자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정해진다.<sup>12)</sup> 곧 확대 재생산율은 자본가들이 도달해야 할 이윤 추구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확대 재생산율은 자본가들에 의한 자율적인 이윤 추구 행위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 확대 재생산율은 그것이 등장하자마자 곧 자본가들에게 타율적인 강제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의 성격이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 이후, 자유로운 경쟁에서 타율적인 경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본가와 자산가들이 봉건 국가로부터 경

---

11) 칼 맑스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의 동기 뒤에 자리잡고 있는 비인격적인 힘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데에 못하고 있다. 그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도 계속 자본가들의 사적인 이윤추구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칼 맑스, 『자본론 I』,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1996), 제 6장.

12) 이 글에서 평균 이윤율의 개념보다는 확대 재생산율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평균 이윤율은 사후적인 개념이지만 확대 재생산율은 사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곧 확대 재생산율의 개념이 자본과 자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도달해야 하는 이윤 추구의 범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다 잘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 행위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얻어내었을 당시 경쟁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율적인 경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로 확대 재생산율을 부상시킴으로서 자본가와 자산가를 지배하는 타율적 성격으로 전환된다. 자본가들이 이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지 못한 자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들 역시 '자유로운' 합리적인 선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확대 재생산율은 일차적으로는 자본가를 지배하고 이차적으로는 자본가들을 거쳐 노동자들이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한 인간 사이의 지배 관계를 넘어서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노동자는 그에 더하여 동시에 자본가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 자본가도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를 받는 자본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 사이의 지배 관계는 다시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라는 문제 틀을 넘어서 있다. 그 틀에 의하면 자본가만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고 노동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것으로 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의 현장에서 확대 재생산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생활의 현장에서 확대 재생산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역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의 일 부분은 자본가가 도달하여야 하는 확대 재생산율에 투여된다.

이러한 시각은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의 문제 제기를 훨씬 넘어서 있다. 우선 그 하나는 맑스의 소외론이 생산 관계에 의한 소외론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그 다른 하나는 맑스의 노동가치설에 대한 부정이다.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지배라는 시각에서 소외는 자본가들의 소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 규정되고 또한 확대 재생산율에 준하여 변동되는 자본과 자산 가치의 변동을 파악하게 해준다. 동시에 확대 재생산율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게 함으로써 맹목적인 성장의 추동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역사로 나타나고, 역사로부터의 소외인 것이다.

확대 재생산율의 시각은 거의 모든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확대 재생산율에 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준다. 물가도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임금 인상도 확대 재생산율의 폭과 상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것은 자본가와 자산가가 필연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행동의 범위에 의하여 자본가와 자산가의 행동이 강제되고 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최소한 확대 재생산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를 무시하게 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확대 재생산율의 복리로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수년 내에 파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확대 재생산율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자산가는 이른바 투자가치가 있는 대상에 투자하는 방법인 채테크를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가와 자산가 사이의 경쟁이 단순히 소유욕(Habgier)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소유욕이 또는 그들의 자율적인 선택이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임금생활자와 월급생활자에게는 확대 재생산에 의한 지배가 이중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나 고용자가 지배받고 있는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해 상승하는 각종 물가 상승을 따라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가들이나 자산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다. 자본가들과 자산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부담을 임금 생활자와 월급 생활자가 떠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부담을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생존 경쟁의 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자본가나 자산가가 아니라 임금 생활자와 월급 생활자인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직장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물가 상승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경제인이 되고 공리주의적 인간이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율적인 강제에 의한 것이다.

## II-2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지배;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탄생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은<sup>13)</sup>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탄생을 야기하였다.

영국에서는 그 당시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상·공업자들이 봉건 국가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운 이윤 추구의 자유를 획득하여 가고 그 결과 아담 스미스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부르조아지들에 의한 자유로운 이윤 추구의 경쟁은 평균적인 이윤율을 만들었고 그것은 바로 부르조아지들이 도달해야 하는 이윤 추구의 범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부르조아지들의 이윤 추구의 ‘자유’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 부르조아지들의 이윤 추구 행위가 자율적인 행위에서 타율적인 행위로 전환하게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확대 재생산율이 부상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이윤 추구의 경쟁은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기 위한 타율적인 이윤 추구의 행위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도 잠시 동안이나마 자율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존재에서 최소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타율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sup>14)</sup>

그 사실은 확대 재생산율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제율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고 또한 경제인이나 공리주의적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확대 재생

13) 시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는 사회의 자립화(Verselbstaendigung)와 동의어이다. 다만 사회의 자립화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대 재생산율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지배된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함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줄고, “인간의 폭력으로서 확대 재생산율”, 『현상과인식』, (1998, 가을·겨울) 참조.

산율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 자본주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형이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고 있다.<sup>15)</sup>

물론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형에 의한 경제 행위만을 ‘현상적’으로 관찰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현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형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16)</sup>

시장은 ‘최소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작동된다. 모든 경제 행위는 이러한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제 행위는 무가치한 것이거나 파산과 부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확대 재생산율에 따라 은행 이자와 물가 상승률이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모든 자본과 자산을 ‘최소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도록 투자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문율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윤의 극대화나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은 확대 재생산의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 산업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 낸 인간이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인간은 확대 재생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곧 광고에 의하여 항상 새로운 욕구를 자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구별짓기<sup>17)</sup>의 상승 작용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II-3 확대 재생산율의 결과; 역사로부터의 소외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인류에게 안겨 주었다. 그 하나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의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로부터의 소외가 그것이다.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을 경제적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에 상응하여 자신의 효용의 극대화를

---

15) 이러한 사실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윤 추구의 과정 내지는 상품 교환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해 왔던 경제학 설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시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는 설명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16) 알렌 뚜렌은 『현대성 비판』에서 자아를 주관적 자아(je)와 객관적 자아(moi)를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객관적 자아는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아의 부분이고 주관적 자아는 사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자아의 부분이다. 이 이론을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에 적용하면 그 두 인간형은 객관적 자아의 부분인 것이다. 곧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다 정확하게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형성된 인간형인 것이다. 알렌 뚜렌, 『현대성 비판』, 정수복·이기현 옮김, (문예, 1995).

17)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의 개념을 변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비교,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새물결, 1996).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뿐 아니라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역사로부터 소외되도록 만들었고, 역사는 인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그 결과 인류로 하여금 역사에 책임질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확대 재생산율과 역사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탄생의 세 개념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역사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또는 그들은 확대 재생산율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고, 확대 재생산율은 역사에 책임질 수 없는 인간형인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역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의 합으로 나타난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사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들의 행위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 역사는 한편에서는 확대 재생산율의 재생산으로 나타나서 다시 사회 구성원들을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적 지배하에 묶어 둔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확대 재생산율은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율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곧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 →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배 →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확대 재생산율의 도달 → 강화된 확대 재생산율의 재생산 → 사회 구성원들의 지배의 과정이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이다.

산업 자본주의의 출발과 더불어 출현한 확대 재생산율의 강제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은 타율적으로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확대 재생산율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곧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회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율의 순환 과정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순환 과정이 단순 재생산의 과정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순환 과정이 되풀이되면 될수록 사회구성원들은 보다 강도 높은 사익 추구자가 되어야 하고 보다 강도 높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 간다. 그 결과 보다 강화된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에 의한 이윤 추구와 효용 추구는 환경 파괴와 사회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선과 공공재의 보호와 유지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들의 관심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공공선과 공공재의 보호와 유지는 그들의 이윤 추구와 효용 추구와 대립하고 있고, 근대 국가와 시장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윤과 자신의 효용을 추구할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인에 의한 이윤 추구와 공리주의적 인간에 의한 효용 추구 사이에 사회적 강제력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효용 추구의 행위는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데 비하여 경제인에 의한 이윤 추구의 행위는 경제적인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해야 하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효용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는 요구보다 더 강제적이다.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효용에 도달해야 하는 요구는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공리주의적 인간형은 공공재와 공공선을 위하여 자신의 효용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에 있다.

산업 자본주의의 진행 방식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바로 확대 재생산에 의한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차의 엔진은 확대 재생산율이고 그 기관차의 바퀴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동원된 사회 구성원, 곧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인 것이다.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에 대한 이해는 근대성, 또는 자본주의의 맹목적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역사를 의미한다.

이 악 순환의 결과는 공공선과 공공재,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 사회 내부와 사회 외부 모두에 대한 파괴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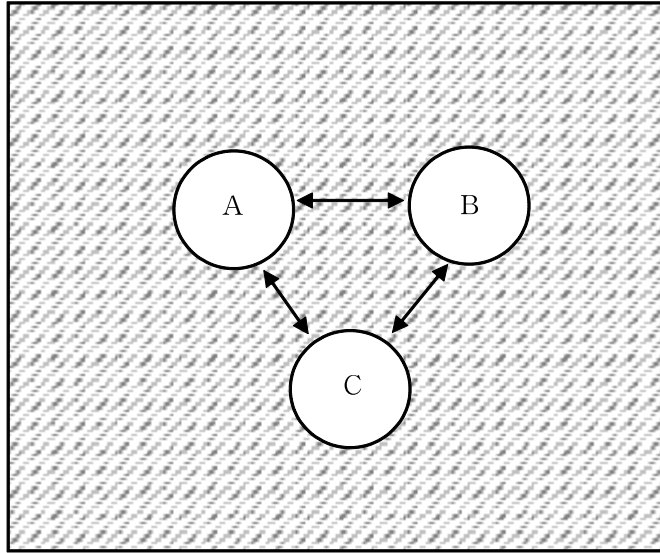
#### II-4. 무관심의 영역의 존재와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

산업 자본주의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 확대 재생산율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은 동시에 사회 구성원을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sup>18)</sup>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확대 재생산율 만큼 확대되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확대되는 만큼 사회의 외부(자연)와 내부(사회)는 동시에 파괴되고 있다. 사회 외부의 파괴는 환경 파괴로 나타나고 사회 내부의 파괴는 실업율의 증가나 삶의 조건의 악화로 나타난다.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은 사회 구성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영역,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그 무관심의 영역은 사회 구성원들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경제인, 또는 공리주의적 인간들로 변화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그 무관심의 영역은 부담의 외재화를 서로 묵인하게 하고, 그것은 공공 영역의 파괴를 서로 방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영역이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되는 것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행동 규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행동 규칙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이다.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과 효용의 추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에 의해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none of one's business)의 영역, 상호 불가침(DMZ)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가 공공 영역, 공유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효용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가정에 충실하면 어떤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none of my business)’ 때문이다.

18) 칼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에서 경제인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시장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



무관심의 영역<sup>19)</sup>

이렇게 무관심의 영역은 부담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the load)를 묵인하게 만든다. 곧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으로부터 자신의 이기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사용한 것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에 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의 파괴,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에 대해서 경제인, 공리주의적 인간이 된 사회 구성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홉스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장에서 상대방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효용을 위해 싸울 수도 있고<sup>21)</sup>, 아담 스미스나 제레미 벤담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할 수도 있다.

홉스가 상정하고 있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에 의한 사회는 각자의 영역,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이다. 만인의 계약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인 레바이어던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되어진 사회에서는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 스미스나 벤담의 가정은 현대의 기본적인 사회조직원리로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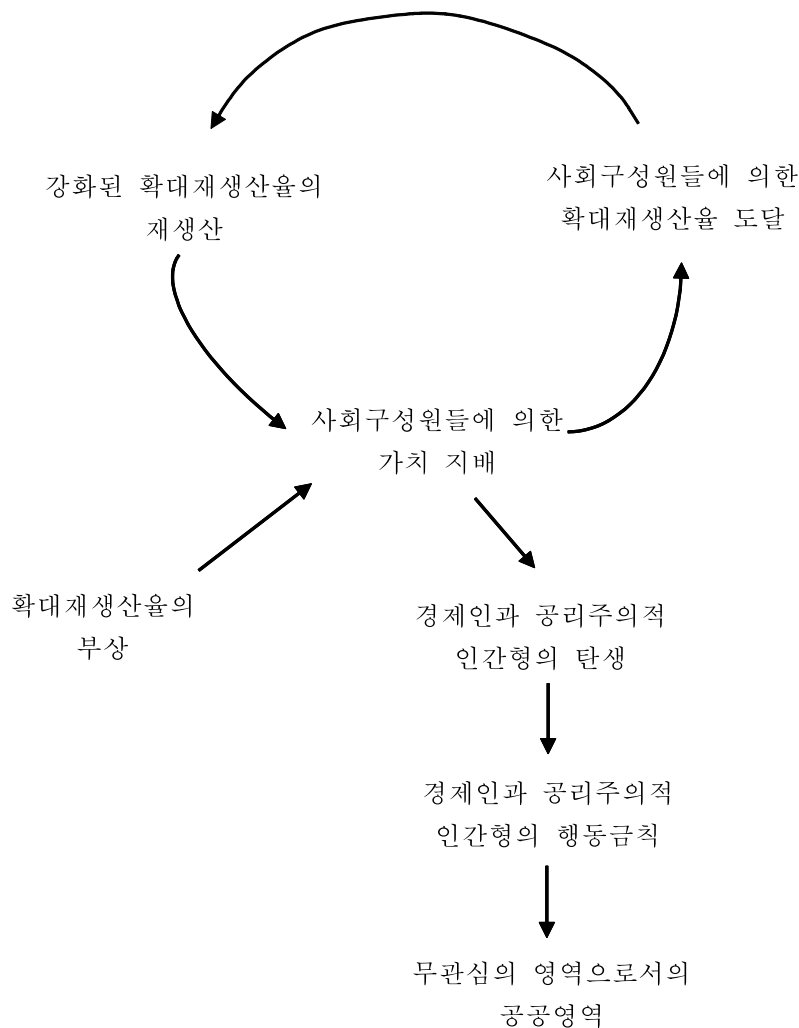
19) A, B, C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게 되면 빗금친 부분은 무관심의 영역으로 남는다.

20) 물론 국가 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 의한 공공 영역의 파괴가 모두 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 영역의 파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이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행동 규칙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아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21) 토마스 홉스, 『레바이어던』, 254-258쪽.

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위해 공공재와 공공선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이익과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익과 효용의 추구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그 결과,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면 공공재와 공공선에 대한 무관심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상대방에 의한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를 묵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는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 →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배 →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의 탄생 →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의 행동 규칙 → 무관심의 영역으로서 공공 영역’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는 확대 재생산의 순환, 강화의 과정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 →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배 →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확대 재생산율 도달 → 강화된 확대 재생산율의 재생산 → 사회 구성원들의 지배’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확대 재생산율의 악순환 구조에 의하여 설명된다. 위에 설명한 인과 관계와 순환 과정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확대 재생산율의 순환 과정에 의하여 공공 영역의 파괴의 인과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확대 재생산의 순환, 강화 과정은 끊임없는 부담의 외재화의 과정이다. 그 예는 환경 파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연이 자유재로 취급된 것은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환경 파괴 역시 산업 사회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자연 환경은 시대 구분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정복의 대상이고 지배의 대상이었고 그 만큼 산업 사회 이전에도 환경 파괴는 일어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류가 군집 생활을 시작한 약 12,000년 전부터 자연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환경 파괴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산업 사회는 보다 많은 자연이 자유재로서 사용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확대 재생산율에 의한 지배에서 찾을 수 있다. 확대 재생산율의 지배는 자연 환경과 자연 자원이 매년 확대 재생산율 만큼 자유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연 파괴는 그 확대 재생산율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확대 재생산은 그 만큼의 자연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 재생산율의 부상과 그에 의한 확대 재생산의 순환 과정은 자연 환경과 자연 자원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다. 그럼에도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형은 그것을 '상호'

목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공공재인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자원에 대한 환경 부담에 대해서 계산에 넣지 않고 자연을 자유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II-5 세계적인 수준에서 무관심의 영역과 공공 영역의 파괴

세계적인 수준에서 무관심의 영역과 공공 영역의 파괴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의 장은 경제적인 장으로서 국경을 단위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의 장은 정치적인 장으로서 각 국가들이 상호 불가침의 원칙에 의하여 각 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나라의 국경을 단위로 보면,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의 수준에서 보면, 각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이라는 목표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평균 이윤율, 확대 재생산율, 경제 성장률은 각 나라의 부의 증가를 나타내 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높은 나라는 경제적인 부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그것이 낮은 나라는 부의 증가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들이 스스로 이 평균 이윤율, 확대 재생산율의 범위를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확대 재생산율'이 거꾸로 세계 시장에서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은 스스로 부의 확장의 범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세계 시장에서의 평균 이윤율에 도달해야 하는 강제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에 이르지 못하면 외국 빚의 지불 능력이 없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점차 추락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경을 단위로 한 나라에게 전세계적인 평균 경제 성장률에 도달하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나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만든다. 또한 그것은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에 대해 각 국가들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 공유의 공간, 공공 영역의 파괴를 묵인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가 간의 상호 불가침의 영역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1910년 윌슨의 자결주의로 연결되고 있다. 국가 간의 상호 불가침의 영역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공공 영역을 무관심의 영역으로 방치하게 함으로써 전지구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전지구적 위기는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느 국가나 국제 기구가 다른 국가가 행하고 있는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 기구는 각 국가에게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제도 정치의 한계인 것이다. 제도 정치는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 III. NGO의 등장과 활동

지금 전 세계는 시민사회단체의 르네상스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약 3-4 백년 전 유럽의 봉건 국가를 위협하였던 부르조아지의 등장과 버금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688년 영국의 명예 혁명과 1789년 불란서 혁명을 주도하였던 세력은 다름 아닌 부르조아지였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시장의 자유는 봉건 국가의 정치적인 지배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고 그 대립은 두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봉건 국가는 무너졌고 마침내 부르조아지들은 정치적 신분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에 의하여 구축된 근대성과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 국가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근대성과 자본주의 체제는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시장과 근대 국가라는 두 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지만 시장과 근대 국가는 근대성과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근대성과 자본주의는 공공선과 공공재의 급격한 파괴라는 봉건 국가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 또는 시장에 의한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의 한계는 경제 시스템을 재정치화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경제 시스템의 재정치화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에 대응하여 국가 공공 영역, 공공재와 공공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개입으로 나선 경우를 일컫는다.<sup>22)</sup> 그것을 하버마스는 국가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로, 백은 국가에 의한 위협의 허용 범위의 인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 정당성 연구』에서 ‘사회 진화는 생산력의 발달, 체제적 자율성(권력)의 강화와 규범적 구조들의 변화라는 세 가지의 차원으로 이해하고’<sup>23)</sup>, 어느 사회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를 ‘그 시스템의 구조가 그 시스템의 존립 유지에 필요한 것 보다 적은 문제 해결 능력밖에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sup>24)</sup>라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후기 자본주의에서 경제 시스템의 위기가 정치 시스템으로 이전되었지만 정치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후기 자본주의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올리히 백의 이론은 위협을 생산해 왔던 근대화의 과정과 더 이상 위협을 생산하지 않는 반성적 근대화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정치적인 것의 재발견』에서 근대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위협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가에 의한 위협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인정은 위협의 축적이나 위협의 폭발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버마스나 백의 이론의 공통점은 그들의 이론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22)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적극적인 형태에서 소극적인 형태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각 나라는 이 스펙트럼의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예는 적극적인 형태에 속한 주로 유럽의 사회 복지 국가 모델에 따르고 있다.

23) 하버마스, 17쪽.

24) 하버마스, 12쪽.

다. 그 첫 번째의 단계에서 그들은 근대성과 자본주의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두 번째의 단계에서 그 문제들이 국가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세 번째의 단계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민과 시민사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나 백이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시민과 시민사회의 출현은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와 근대 국가에 의한 그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점은 근대성, 또는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인식이 전제되지 않을 때 시민과 시민사회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5)</sup>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는 하버마스와 백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시민과 시민사회는 그 성격상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사회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민은 사익 추구만이 아니라 최소한 공공재와 공공선에 대한 배려를 하는 개개의 사회 구성원을 가리키고 시민사회는 그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사회는 그 존재가 쉽게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대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다. 조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조직된 시민과 시민사회인 시민사회단체가 근대성과 자본주의 체계 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

### III-1 공공선과 공공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사회단체는 조직된 시민사회이다. 시민과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존재의 성격과 이합 집산의 성격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등장으로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시민과 시민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곧 시민과 시민사회는 가끔 발생하는 시민 운동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추상적이고 분산적이어서 근대성의 위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시민과 시민사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시민사회단체의 등장으로 해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장에 의한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를 막고, 근대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공공재와 공공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차적으로는 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유지되고 이차적으로는 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장과 근대 국가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

25)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인식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알렌 뚜렌이 성공하고 있다. 그는 그 뿐 아니라 그 인식의 간격을 메우는 데에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중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알렌 뚜렌,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것인가』, 고원 옮김, (당대, 2000)



보를 시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동시에 그를 통하여 공공성에 관심을 갖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시민과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시민사회단체의 존립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자동적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시민사회단체의 생명력은 바로 공공재와 공공선의 파괴에 대한 정보와 지식 제공에서 출발한다. 그 내용은 시민사회단체가 전개하는 운동에 담겨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 환경이나 사회 간접 시설 등과 같은 공공재, 또는 사회 규범이나 윤리, 사회 질서 등과 같은 공공선 없이 사회 구성원은 안전하지 못하거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공공재와 공공선은 매우 급속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고 그럼에도 그 파괴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사회 주체로서 근대 국가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곧 시장이 파괴하고 있는 공공재와 공공선의 양과 속도에 비하여 국가의 대응은 너무 미약한 것이었다. 그 공백을 시민사회단체가 메우고 있다.

### III-2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적인 연대

NGO는 위의 II-4 장과 II-5 장에서 지적한 개인 간의, 국가 간의 상호 불가침의 DMZ의 영역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특히 NGO들의 국제 연대에 의한 전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로의 도약은 현재로서는 전지구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NGO들의 활동은 국가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전지구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지구적인 NGO들(Green Peace, Amnesty International 등)이 있지만 Global Governance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되고 있는 NGO들이 전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 연대를 결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환경의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금융 자본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로 제 1 세계와 제 3 세계의 구분 없이 어느 나라나 위협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NGO들의 국제 연대는 이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NGO들에 의한 국제적 연대의 결성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환경 문제의 피해자는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남미의 아마존강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원시림 파괴에 의한 희생자는 전 인류이고, 일인당 에너지의 소비 비율이 높은 선진국의 생활 수준은 전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부터 NGO들에 의한 국제 연대의 필연성이 도출된다. 곧 전세계의 NGO들은 전지구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전지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면 될수록 그 문제를 전지구적 여론과 시민 사회에서 검토하게 만드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NGO들의 국제 연대는 전지구적인 시민 사회를 자극함으로써 시민 사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NGO의 활동 대상이 한 나라의 국경 내에 정부나 기업에 국한하여 있었을 때 보다 NGO들의 국제 연

대의 활동은 전 세계의 시민 사회와 여론을 향하여 열려 있을 경우에는 NGO들은 훨씬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효종,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인간사랑, 1994)
- 안토니 기든스, 『제 3의 길』, 한상진·박찬욱 옮김, (생각의 나무, 1998)
- 알렌 뚜렌, 『현대성 비판』, 정수복·이기현 옮김, (문예, 1995)
-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원 옮김, (당대, 2000)
- 이홍균,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부 조직”, 『동서연구』, (1997)
- “인간의 폭력으로서 확대 재생산술”, 『현상과인식』, (1998, 가을·겨울)
- 위르겐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 정당성 연구』, (청하, 1983)
- 하이예크,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민경국 옮김, (문예, 1990)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 1996)
- 칼 맑스, 『경제-철학 초고』, (박종철출판사, 1991)
- 『자본론 I』,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1996)
-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
- 토마스 홉스, 『레바이어던』, (삼성사상전집)
-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새물결, 1996)
- Georg G. Iggers,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7)
- Jue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II, (Suhrkamp, 1981)
- Ulrich Beck,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Suhrkamp, 1987)
- Ulrich Beck, *Risikogesellschaft*, (Suhrkamp, 1986)

## 논문 개요

이 논문은 근대성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한계가 시민사회단체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시장은 확대 재생산술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그에 의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과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행동 규칙을 따르는 경제인과 공리주의적 인간은 공공 영역을 무관심의 영역으로 묵인하고 방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익과 공익을 모두 추구해야 하는 상호 모순적인 이중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파괴를 모두 보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민과 시민사회가 20세기 중반부터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됨으로써 반성적인 근대화(올리히 벡

의 의미에서)의 주체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적인 연대가 결성되어 감으로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더 넓은 활동 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Abstract

The Modernity, which the market and the State sustained, has the limit of the problem - solving capacity. The Civil - Society Organization begin to cover the limit. The market is governed by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the market change the social actor the Homo Economicus and the utilitarian man. By the Homo Economicus and the utilitarian man, which follow rule of action - 'if one don't enter in the other's sphere, one can maximize the profit and the utility' - , is not cared the public sphere, because the public sphere is sphere of 'none of their businesses' for them. The State, by which the privat- and the public interest is fulfilled at the same time, must play a 'contradictory' role, therefore can protect only in part the destruction of the public sphere.

The Citizen and the Civil - Society have acknowledged the crises of the Modernity from the middle of 20 century, at the end of 20 century has began to organize the Citizen and the Civil - Society to Civil - Society Organization(CSO). CSO act as the subject of reflexive - modernization(in the meaning of Ulrich Beck). Through the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ies of CSO's is expected that CSO's play the more role in social development.